성장기반 확충과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투자 선진화 전략

-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11～'13) -

2011. 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그간의 추진상황 및 평가 ····· 1

1. 그간의 추진상황 ····· 1
2. 新정부의 성과와 평가 ····· 3

Ⅱ. 환경변화에 따른 FDI의 새로운 역할정립 ····· 4

1.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여건 ····· 4
2. FDI의 새로운 역할정립 ····· 5
3. 비전과 목표 ····· 6

Ⅲ. 외국인투자의 新 메커니즘 창출 ····· 7

1. 외국인 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 ····· 8
2. 맞춤형 유치모델을 통한 투자유치선 확대 ····· 13
3. 인센티브 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 18

Ⅳ. 외국인투자 유치의 거버넌스 혁신 ····· 21

1. 입체적 투자유치 거버넌스 정립 ····· 22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 25
3.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26

Ⅴ. 편리하고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 27

1.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확충 ····· 28
2. 외국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31
3. 상시적 투자애로 해결체계 구축 ····· 33

Ⅵ. 후속조치 계획 ····· 40

I. 그간의 추진상황 및 평가

1 그간의 추진상황

□ 외국인투자는 **'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유화 조치**와 **지원기반 마련**을 통해 크게 증가

○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전면 허용**('98),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대폭 축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정**('98)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투자유치 기조로 전환**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수 변화 : ('95) 150개 업종 → ('11) 29개 업종

□ 2000년대 들어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원제도를 확충**

○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수립('04),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확대, 경제자유구역* 조성 착수**('03)

* 외국인투자지역 : ('99.12월) 4곳 → ('11.6월 현재) 66곳
*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곳이 지정·개발 중

○ FDI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 M&A 감소**와 **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투자규모는 **정체**(신고기준) **내지 감소**(도착기준) **국면**

* 신고액 : '05년 이후 110억불대에서 정체, 도착액 : '06년(91억불) 이후 감소 추세

< 외국인투자 규모 추이 > (단위: 억불)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신고액	70	89	155	153	113	91	65	128	116	112	105	117	115	131
도착액	31	53	110	103	50	38	51	93	96	91	79	84	67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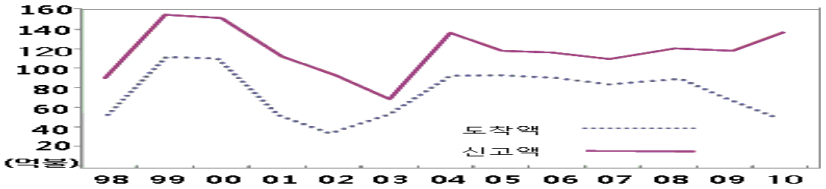
□ **新정부**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과 **국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가경쟁력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치 분야 선정** 등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

<참고 : 우리나라의 FDI 현황>

□ (규모) 신고액 규모는 **외환위기 극복** 시점을 기점으로 축소되어 **110억불~120억불대의 정체 지속후 '10년도에 130억불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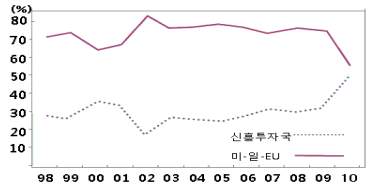
○ **도착액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감소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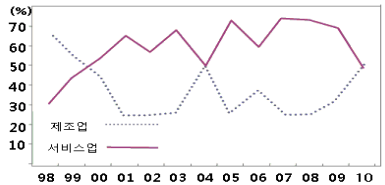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신고액 추이>

□ **(투자국) 미국, EU, 일본** 등 전통 선진국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였으나, **'10년도에 신흥국의 비중이 44.5%까지 급증**

□ **(업종) 제조업 비중**이 **30%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10년도**에 **50.9%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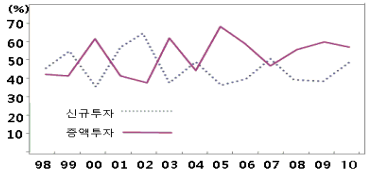
<선진국-신흥국 투자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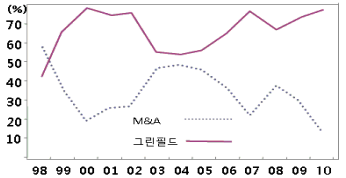
<제조업-서비스업 투자비중>

□ **(신규/ 증액투자) 증액투자**가 **200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증액투자 61.5%, 신규투자 38.5%**

□ **(유형별) 그린필드형이 주류**이며, 2000년대 들어 **'04년도 최저치** (51.8%)**를 기록 이후 '10년 84.6% 까지 꾸준히 상승**



<신규투자-증액투자 비중>



<M&A형-그린필드형 투자비중>

2 新정부의 성과와 평가

□ **'제1차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08.5)을 기점으로 투자환경 개선과 더불어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노력을 경주**

* 신정부의 FDI 관련 주요시책 : 외국인 투자환경 3개년 계획('08.5월) →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09.5월) →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10.9월)

○ **신성장동력, 서비스 산업**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중국·중동** 등 **對 신흥자본국 유치활동에 물꼬**

○ **유치실적** 면에서도 **세계경제 침체의 어려운 대외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시현

* '10년도 세계 FDI(Outward)는 '07년(2조 3천억불) 대비 40% 이상 급감(1조 3천억불)하였으나, 국내 유치규모(신고기준)는 외환위기 이후 10년내 최고 수준(131억불) 기록

○ 신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기조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

* Doing Business 순위(WB, '10.11) : ('08)23위 → ('09)19위 → ('10)16위

□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유치전략, 운영시스템** 등에서의 **확고한 개선·보완 노력**이 요구

○ 최근 **투자유치 확대의 발판**은 마련하였으나, **유치실적은 우리나라의 잠재력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투자유치 잠재력지수 세계 16위, 실적은 34위(UNCTAD, '09년까지 잔액기준)

○ 최근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유치시스템 측면**에서 **실질적 기여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

○ **정부·지자체·지원기관(IK)**간의 보다 **유기적인 연계**와 **민간의 전문적 역량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 **투자환경의 점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재권보호, 교육·의료시설**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체감 만족도는 미흡**

그간의 추진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를 재조명함으로써
FDI가 추구해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

II. 환경변화에 따른 FDI의 새로운 역할정립

1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여건

대외적 측면

기회요인

■ **녹색·융합분야의 세계 시장 및 투자 확대**
* 융합 신시장 전망(조불, 딜로이트) : ('08)8.6→('13)20.0→('18)61.0

■ **중국, 중동 등 신흥국의 해외투자 확대**
* 신흥국 투자비중(OFDI,%) : ('07)12.9→('08)15.4→('09)20.8

■ **동북아의 FTA 허브化, G20 개최에 따른 국격 상승**
* G20 개최 이후 인지도(3.6%P↑) 및 호감도(16.6%P↑) 상승

위협요인

■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 유럽재정위기 → 중동사태 → 일본 대지진

■ **新 보호주의의 대두**
* 경기침체 이후 자국산업과 고용 창출 위한 보호조치 확산

■ **韓, 中, 日 분업구조 약화와 경쟁구도화 심화**
* (일본) 외투기업 유치 전략으로 선회(법인세 감면 등)

대내적 측면

기회요인

■ **견조한 경제 성장세 유지**
* ('09)0.3% → ('10)6.2% → ('11e)4.2%~4.5%(IMF, KDI, SERI)

■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위상강화**
* 디스플레이 1위, 휴대폰 2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

■ **융합 확산을 위한 세계적인 IT경쟁력 보유**
* 광통신 인터넷 사용자 비율 세계 2위('09년)

위협요인

■ **남북한 긴장상태의 지속**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잔존**

2 FDI의 새로운 역할 정립

□ (**우리의 위치**) 최근 **외국인 투자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

○ '**투자발전경로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투자가 투자유치 규모**(Stock 기준)**를 초과**하는 이른바 **과도기적 단계**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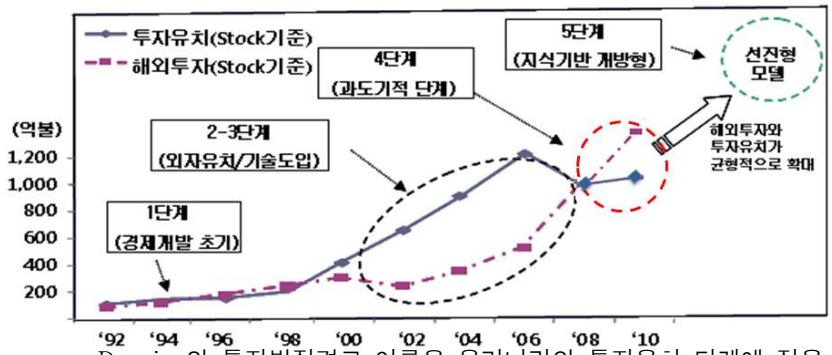
◇ 투자발전경로 이론(Dunning, Investment Development Path) : 해외투자와 투자유치의 누적액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5단계로 구분)와 체계적으로 관련

* 현재 우리나라는 **4단계(해외투자>투자유치)**에 진입했으며, **산업고도화**와 **지속적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서 **해외투자와 투자유치가 균형적으로 확대**되는 **선진형 투자유치단계**(5단계)로 이행 가능

○ **대외적인 경제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청년층 실업문제** 등 고질적인 **당면과제**도 상존

* 세계 7위 외환보유국('11.6월 3,045억불), 세계 7대 수출국('10년 4,664억불)
* 잠재성장률(SERI, %) : ('90~'97)7.0 → ('98~'07)4.5 → ('08~'09)3.8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발전경로>



* Dunning의 투자발전경로 이론을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단계에 적용

□ (**새로운 역할**)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적 당면과제**에 **대응하면서 선진형 투자유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 재정립**

◇ 그간의 **외국인투자 확대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국민경제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설정

◇ **새로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유치 전략**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체화된 유치시스템을 구축**

3 비전과 목표

비전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구현하는 외국인투자

목표

◇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 확대

* 외국인투자 유치 : ('10) 130억불 ⇨ ('15) 300억불

◇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 외투기업 고용규모 : ('09) 35만명 ⇨ ('15) 54만명

◇ 신성장동력 투자유치 활성화

* 신성장동력 유치비중 : ('10) 23.6% ⇨ ('15) 35.0%

중점과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新 메커니즘 구축	1 외국인 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 2 맞춤형 유치모델을 통한 투자유치선 확대 3 인센티브 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외국인 투자유치의 거버넌스 혁신	1 입체적 투자유치 거버넌스 정립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3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1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확충 2 외국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3 상시적 투자애로 해결체계 구축

III.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新 메커니즘 창출

【현황 및 문제점】

◇ (**유치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치분야 선정** 등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유치분야의 선정과 유치활동**을 전개할 필요성

◇ (**제도 및 시스템**) 인센티브의 지원내용과 방식이 **복잡다기하게 구성**되어 있고, **인센티브간 연계성 부족**과 **경직적 운영**으로 **핵심 분야와 기업 유치**에 필요한 **유인기능은 미흡한 측면**

【개선 방향】

◇ (**유치분야**) **미래 성장기반 확충,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 **실질적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유치분야 선정 및 전략 수립**

* (**유입기반 확충**) 녹색, 융합, 고부가서비스, (**고용창출**) 서비스, 숙련제조업, (**지역발전**) 지역 전략산업, 지역개발 등

◇ (**다변화**) **투자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선진국 중심**의 **유치활동**을 **중화·중동** 등 **신흥자본국**과 **러시아·인도** 등 **잠재적 유망국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확대**

○ **선진국**은 **민간의 다양한 협력채널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흥국, 유망국**은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대폭 강화**

◇ (**인센티브**) 유치규모와 더불어 **실질적 기여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등 체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간 활용전략** 명확화와 **상호연계**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층적으로 설계**

* (조세감면) 기본적 지원기능 → (입지) 추가적 유인기능 → (현금) 타겟기업 협상 기능

○ **조세, 입지, 현금** 등의 **인센티브별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과감하게 통합·단순화**

1 외국인 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

1 미래 성장 잠재력 및 외국인투자 유입기반 확충

◇ 신성장동력 분야를 바탕으로 하되, 특히 **'10大 신성장동력 전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로드맵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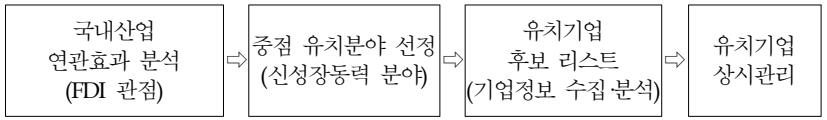
* 17대 신성장동력분야중 조기 성과창출 가능한 10대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11.9월)

○ **유치분야**는 **산업연관 효과, 국내산업 영향** 등을 감안하여 FDI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

○ **유치분야별 타겟기업**은 기 선정된 **135개 기업을 재구성**하여 **매년 기업별 투자정보** 등을 **상시관리**

* 기존 17대 성장동력분야를 대상으로 135개 타겟기업 선정('10.2월)

< 유치분야별 기업선정 절차 >



□ (**녹색기술**) **상용화 분야**는 **내수시장 창출** 등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핵심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유망분야**는 **선진기술 유치**에 중점

○ **태양광, 풍력** 등은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도입('12), **'10大 그린 프로젝트'**** 등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내수시장 창출 지원**

* 발전사들의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22년까지 49조원 시장창출)

** 우체국, 도서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부 보급사업 추진

- **태양전지용 기초소재, 풍력 베어링, 연료전지용 MEA**(전극접합체) 등 취약한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유치를 통해 **안정적 산업기반 구축**

○ **에너지저장, 스마트그리드, 탄소포집저장장치**(CCS) 등 **유망분야의 국제공동 R&D** 사업 등을 활용하여 **공동 투자**와 연계

* 미국(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캐나다·호주(CCS) 등 에너지기술 선진국 대상 투자유치

□ (**첨단융합**) 세계적 **IT경쟁력, 다양한 제조기반** 등 **국내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異種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

○ 전기**자동차**, IT융복합기기용 **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융합·고도화**를 위한 **취약분야**의 **파트너**를 집중 유치

* 전기車(융합부품), IT융복합기기용 반도체(시스템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핵심소재) 등

○ **국내외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시장의 **투자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IT융합지원센터'**를 활용 국내외 기업간 **공동투자** 등 협력을 유도

* 신성장동력펀드 : 금년도에 글로벌 펀드 1억불을 포함 2,810억원을 추가로 조성

□ (**고부가 서비스**)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 공동 프로젝트** 등 통한 **역량강화 및 협력기회 제공**

○ **바이오·제약** 분야는 **개발 신약의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국제 공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

* 사례(S社, 바이오시밀러 업체) : 싱가폴 테마섹으로부터 1.9억불 투자유치

○ **콘텐츠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글로벌콘텐츠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메이저와의 공동 프로젝트** 기회제공 및 협력여건 조성

* '12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하여 국내외 공동 프로젝트 등에 투자

○ **헬스케어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스마트케어**(환자대상), **u-Wellness**(일반인대상) 시범사업 등을 통한 **조기 시장창출 지원**

* '12년까지 환자 1만명 대상 원격진료 시범사업(스마트케어), u-Wellness 시범사업은 내년 착수

□ (**R&D**) 지역의 **R&D, 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선진국의 아시아 거점 진출 수요**를 활용한 **유치 활동 전개**

* 사례 : 막스플랑크(소재, 포항공대), 프라운호퍼(바이오, 전남 생물의약단지)

○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연구개발 특구'**('11년 광주, 대구 신규지정)를 **지역산업 특화 전략**과 연계하여 **R&D 기관 및 기업 유치**

○ **선진국의 글로벌 대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시 **R&D 센터 유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등 지원 확대**

* 사례 : 솔베이社, 특수화학부문 글로벌본부 및 글로벌 R&D센터 서울 입주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의 **그린필드형 투자유치**에 집중

○ 고용창출 효과, 국내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형 유치업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유치활동 추진**

* 관광·레저, 물류·유통, 숙련 집약 제조업 등

○ **고용창출** 효과 높은 외투기업에 **입지, 현금** 등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개편과 연계**

□ (**관광·레저**) 기 추진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조기 도출**하고, **신규 유망 프로젝트**의 발굴 및 유치활동 강화

○ **유치효과**와 **성공가능성**이 높은 **유망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유치 지원 활동을 전개**

* 관광레저(태안, 영암·해남 등), FEZ內 복합관광(인천, 새만금 등), 테마파크(화성, 제주 등)

- KOTRA, 관광공사 공동 **'관광레저투자지원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MIPIM World'**(국제부동산투자박람회) 등을 활용한 **IR 개최**

○ **항공·수상 레저** 등 신규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호주, 스웨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집중

□ (**물류·유통**) **글로벌 물류거점과 연계한 제조업 유치** 및 **국내 유통산업**의 **보완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 **인천공항** 및 **부산신항만, 동북아 오일허브** 등 신규 조성중인 **물류거점의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촉진

*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미국, EU, 싱가폴 등의 관련 투자가를 집중 발굴

○ **교외 복합쇼핑몰**과 패션·레저 및 공구용품, 저가생활소비재 등 **국내 유통산업에 보완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유치

* PB(Private Brand) 경쟁력을 보유한 EU 및 유통산업 강국 북미지역을 집중 타겟

□ (**숙련집약형 제조**) **섬유, 식품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숙련집약형 산업**의 **투자 매력도 제고 및 홍보 강화**

○ **동대문, 대구** 등 **섬유산업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외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고용효과 큰 기업을 중점 유치

* 동대문, 대구 봉무동 패션특구('11.11월 지정추진),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등

○ **고용효과**가 **큰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화를 위해 **선진기업 유치**를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를 중심으로 선진 기업·연구소 유치 활성화

3 지역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 지역별 **생산·연구 인프라, 유망 프로젝트**를 활용 **글로벌 앵커 기업** 및 **자본유치**를 통해 **클러스터 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

○ **거점별 클러스터**의 **산업집적 역량**에 대한 **홍보** 및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의 **조기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중화중동권 국부펀드**의 **투자선호도**에 맞는 **지역개발 프로그램 상시 발굴·관리**

□ (**클러스터**)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

○ 지역별 전략산업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상품화사업 지원확대 및 국내외 유사 클러스터간 네트워킹 활성화**

* 전북 식품클러스터·유럽 식품클러스터(농림부), 국내외 클러스터 교류사업(지경부) 등

○ **산업단지 브랜드화*** 사업(예시 : 구로공단 → G-밸리)을 IR과 연계하여 홍보하고, **클러스터 경쟁력 분석**을 통한 우수 클러스터 **해외 홍보 강화**

* IMD, World Bank 등 해외 유수기관의 지표를 참고, 한국형 지표를 개발

○ **'QWL***(Quality of Working Life)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투자매력도를 제고**

*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노후 산단 대상으로 1차사업 추진중

□ (**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에 입각하여 **조기개발을 가시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 정립

○ 현존지구에 대한 **조기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투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지속 확대**

- **성과평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등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발지연 지구**에 대해서는 **조기개발 추진계획** 수립('11년)

- **조세감면, 외투기업 입지제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 **의료·교육기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사업서비스업 등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 등

○ 외국 특구의 모방형에서 탈피, **우리 현실**과 **여건**에 **맞는** 2020년까지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지역별 산업별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구역별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차별화된 발전전략** 및 **투자 유치방안** 마련

□ (**지역개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은 **중국, 중동권** 국부펀드를 대상으로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상품을 발굴**

○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중국의 관광 및 투자수요**를 적극 흡수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 **제주헬스케어, 인천 Air-City, 강원 알펜시아** 등 **관광, 투자이민제***와 연계할 수 있는 투자상품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알펜시아 지역 이외 인천, 새만금 등에도 도입 추진

○ **안정적 수익확보** 차원에서 대체로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국부펀드 성향에 맞춘 매물 제시**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 **용산 역세권 개발, 인천 청라 지구**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중장기 프로젝트*** 지속 발굴

* 사업기간 5~10년 이상이며, 주거·상업·업무단지 복합개발로 자산가치 상승 기대

2 맞춤형 유치모델을 통한 투자유치선 확대

1 전통 선진국 : 미국, EU, 일본, 호주 등

<전통선진국 투자협력 모델>

FTA 域內국가 (미, EU 등)	자본/기술 ------>	한국	자본/기술 <------	FTA 域外국가
‣ 중국시장 진출 거점		‣ 첨단 기술 및 선진 서비스		‣ 미·EU 시장 진출
‣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절감	<------ 아시아거점	‣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	------> FTA시장	‣ 안정적 투자처 확보

□ (**유치분야**) 국가별 **산업특성** 및 지역별 **투자동향 분석** 등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중점 유치분야 및 타겟기업 선정

○ (**미국**) 아시아시장 거점 확보를 추진하는 **선진 금융·비즈니스서비스, 첨단융합산업, 지역개발** 분야의 투자 수요 적극 발굴

* 투자특성 : 최근 3년간 서비스분야 투자비중(76.7%)이 크며, 금융·보험에 집중

- **지역별 산업특성**(서부 : 첨단융합산업 등, 동부 : 선진 금융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투자유치** 활동 전개

○ (**EU**) **녹색산업** 및 **첨단산업**이 발달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테크놀로지, 첨단 부품소재** 분야 선진기업을 중점 유치

* 투자특성 : 최근 3년간 제조업중 전기전자, 화공분야 투자비중(46.2%)이 높음

- **재정위기 지속**에 따른 투자여력 감소를 감안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지역본부·R&D센터**의 **아시아거점** 유치

○ (**일본**) **첨단 제조업 강국**인 특성을 반영하여 **對日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및 **IT 장비업체** 중심으로 타겟기업 발굴

* 투자특성 : 최근 3년간 제조업 투자비중(56.9%)이 높고, 전기전자분야에 집중

- 국내기업의 협력업체, **對日역조품목 생산업체**, EU·美와의 **FTA를 활용한 수출거점** 확보 등의 수요를 적극 흡수

○ **(호주 등 기타) 금융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SOC·관광·레저** 등 대규모 지역개발 분야의 투자유치 집중

＊ 맥쿼리(호주)는 14개 국내 민간투자사업(SOC)의 SPC에 투자

□ **(유치전략) FTA** 등 기회요인 활용과 **민간 기업간의 다양한 협력 수요** 발굴을 통해 선진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 **(FTA 활용)** EU·美와의 FTA를 기반으로 **FTA 허브 구축**을 통해 EU·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域外지역 기업**들의 **신규투자 유도**

- **관세인하 효과**가 큰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 **유망 업종 분석**을 통해 대상 기업 발굴

- EU·美 대상으로 FTA체결에 따른 **서비스분야 투자수요** 흡수

○ **(다중협력)**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투자유치 희망 중소기업간 **공동 R&D, 합작투자, 유통망 공유** 등 **국내기업의 성장 발판** 제공

- 글로벌 **다중협력사업(GAPS) 확대**(제조업→서비스업), 투자수요기업과 글로벌 기업 연계 프로그램 **GCGK**(Global Capital Global Korea) 사업 추진

○ **(부품소재) 국내산업 Value Chain 고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선진부품소재기업 유치

- **부품소재전용공단**별로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화된 유치분야*** 선정하고, **부품소재투자협력센터**를 통한 맞춤형 유치 지원

＊ 구미(전기전자), 포항(철강 등 소재), 익산(신재생에너지), 부산진해(자동차·조선)

- **국내 산업기반** 및 **대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해외 부품소재 기업에 대해 **산업계와 공동 투자유치 활동** 강화

- 일본·독일 등 선진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매년 조사**하여, **유치기관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공동 투자유치 활동** 전개

＊ OASIS(해외부품소재 투자정보시스템)의 내실화 및 업데이트 지속

2 신흥국 : 중국, 중화권(홍콩, 싱가폴, 말련, 인니), 중동

중 국

<한-중 투자협력 모델>

중국	자본/시장 ---------->	한국
- 미·EU시장 진출 - 브랜드이미지 제고	<---------- FTA시장/브랜드	- 중국내수시장 진출촉진 -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

□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협력채널**을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채널까지 다변화**하여 **투자협력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확산**

○ **(중앙-지방정부 간)** 정부간 고위급 채널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장관급)' **개최를 정례화** 하는 등 결속력을 강화

- **'한·광둥성 경제무역발전포럼'** 등 **중앙·지방 간 협력채널**을 해외투자가 활발한 여타 거점지역까지 확대 추진

○ **(공공기관) 중국투자공사** 등 한국투자에 관심이 높은 **中 국영기업*** **등과 국내 유관기관**(KOTRA, 인천 FEZ, 한국투자공사 등) **間 협력확대**

＊ 중국투자공사(세계5위 국부펀드)는 1억불 규모 한국전용펀드 조성('11.3)

○ **(민간)** '차이나 클럽', '주중 한국상회' 등을 매개로 **민간주도**의 **투자협력 네트워킹 활성화**를 지원하고, **투자관련 상호 인식개선** 유도

- **對韓투자 우수 중국기업에 대한 포상*** 등과 더불어 양국간 문화적 차이 해소에 주력

□ 중국자본 유치 전담조직인 **차이나데스크**를 주요 거점지역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중화자본 유치활동** 전개

○ **차이나 데스크를 지속 확대**(현재 3개→'12년 5개)하고, 권역별 산업구조, 중국정부의 對한국투자 장려업종 등을 감안한 **테마별 IR을 활성화**

<중국 권역별 주요산업 특성 및 China Desk 구축 (안)>

차이나 데스크 설치지역(Hub)	담당권역	Spoke	주요산업	설치시기
상하이	화동권역	닝보, 칭다오	금융, 전자, 소비재	'10년
베이징	화북권역	텐진	부품, 선박	'11년
광저우	화남권역	선전, 샤먼	에너지, IT	'11년
후베이성(우한)	중부권역	창샤, 샨시	운수, 전자	'12년
랴오닝성(다롄)	동북권역	선양	물류, 장비제조	'12년

중 화 권

□ 중화권을 통한 **중국자본 우회투자 수요**를 흡수하고, **금융, 관광, 레저** 등 중화권 투자수요에 맞춰 對韓투자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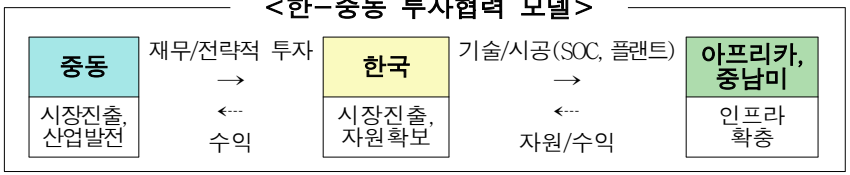
○ **(홍콩, 싱가폴)** 싱가폴 국부펀드(GIC, 테마섹 등)의 **한국투자 수요**를 적극 활용하고, **중국 IR과 연계**한 **한국투자설명회 정례개최**('11년~)

○ **(말련, 인니) 금융·지역개발·IT** 등 말련 관심분야 중심의 IR개최를 검토하는 한편, **인니 경제개발 참여**를 통해 **현지투자진출**과 더불어 양방향 투자협력 등 중장기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주력

* 한국은 인니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의 主 파트너로 참여키로 결정 ('10.12 정상회담)

중 동

<한-중동 투자협력 모델>



□ 기존 **UAE 중심의 중동국가 투자협력 채널**을 **사우디, 쿠웨이트** 등 대규모 해외투자 여력을 보유한 국가로까지 확대

* 주요국 해외투자 규모('09, UNCTAD) : 쿠웨이트(87억불), 사우디(65억불), UAE(27억불)

○ **(UAE) '한·아부다비 투자협력 포럼'** 등 기존 고위급 채널을 정례화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투자협력 활동*** **심화**

* UAE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한국연수 프로그램(아부다비 장관후보자 최고관리자 과정 등) 활용

○ **(쿠웨이트, 사우디) 실무급(실·국장급) IR 개최**를 통해 투자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고위급 IR로 격상 추진**

□ **국부펀드** 등을 활용, **석유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추진 중인 중동 국가들의 **산업고도화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 **중동측 관심분야**(금융, IT, 신재생에너지, 지역개발 등)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희망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국부펀드의 자본력을 결합해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자원·플랜트·SOC시장 공동진출 도모**

□ **한국투자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투자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급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투자성공사례 창출**을 적극 지원

○ 수쿠크 등 **이슬람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유망국 :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 유망국의 **對韓투자가 초기 단계**임을 고려, 국가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으로 **선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 '11년 **러시아, 인도**에서 **최초로 국가 IR을 실시**하고, '12년 이후 **여타 유망국으로 확대** 추진

□ **국가별 강점**을 활용한 **양방향 Win-Win형 투자협력** 모색

○ **(러시아)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국내 상용화기술**을 결합한 공동 **R&D 및 상업화**를 추진하고, **CIS 국가**의 **네트워킹**을 활용한 **공동진출** 협력 추진

○ **(인도) 인도의 IT 서비스와 국내 IT 제조업체**간 공동투자 및 제3국 공동 진출 도모

○ **(브라질)** 브라질 정부의 **'성장촉진 프로그램'*** 등과 연계, 현지 투자진출과 함께 투자유치 확대 추진

* '11~'14년간 에너지, 주택, SOC 등 등 6개 분야에 9,000억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

3 인센티브 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현황 및 문제점】

◇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별** 지원 **체계**가 **복잡**

◇ 성장동력, 일자리창출 등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원기준** 적용 **미흡**

◇ 인센티브 제도의 **경직적**인 운영으로 **전략적 유치**를 위한 **활용 부족**

【개편 방향】

◇ 복잡한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

◇ **유치확대**와 함께 **성장잠재력 확보,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 개선**

◇ **인센티브간**의 **활용전략**을 명확히 하고 **상호연계**를 통하여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레버리지 효과 제고**

○ **(조세감면) 유치대상**에 대한 **기본 지원** ⇒ **(입지지원) 유치효과**에 따른 **추가적인 유인** ⇒ **(현금지원) 타겟분야기업** 유치를 위한 **협상수단**

1 조세감면 : 기본 유치수단으로의 기능 정립

○ **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서비스업 포함 660여개)을 **국내 기술경쟁력 수준, 유치필요성** 등에 따라 **조정**

- 녹색성장, 융합산업 등 **국가전략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범용·상용화된 기술은 과감히 정비**

○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현행 1인당 1천만원, 투자금액 대비 20% 한도)을 부여하여 일자리창출을 유인

* 투자금액 대비 50~70%에 해당하는 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감면 지원하고, 20% 이내에서 고용규모에 따라 추가 감면

2 입지지원 : 유치효과 제고를 위한 지원 체제의 전환

○ **(유형)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외투지역 등 방식과 업종별로 **복잡한 운영 체제**를 **하나의 유형**으로 **단순화** 추진

- 우선 **개별형 중심**으로 외투지역을 **지정·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외투지역 지정이 아닌 **외투기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대상)**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 지역전략산업**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적인 레버리지**로서 지원

○ **(방식)** 현재 국가가 토지를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에서 **외투기업**의 **임대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

* 기존 산업단지, 부품소재전용공단 등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임대 방식으로 계속 운영

- **입지**관련 **인허가 간소화, 국공유지 수의계약** 범위 **확대, 입지정보 제공** 등 외투기업의 **입지**확보를 위한 **서비스**는 **계속 지원**

3 현금지원 : 타겟분야·기업에 대한 전략적 유치 수단

○ **10대 신성장동력 분야, 글로벌 타겟팅 기업, 대형 투자 프로젝트** 등 전략적 대상에 대한 **유치 협상력 제고**를 위해 활용

○ **지원규모**는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기술이전효과**를 지원규모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고용**부문의 **가중치**를 **확대**

-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효과 제고

< 현금지원 매칭비율 수정안(예시) >

현행		변경 후		
구분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구분	대상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수도권	40 : 60	수도권지역	서울, 경기, 인천	* 3개 지역 차등 적용
비수도권	75 : 25	일반지역	수도권 및 낙후지역 이외의 지역	
		낙후지역	균형발전법상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4 고용·교육훈련보조금 : 고용·인력개발 활성화 유인으로서 활용 확대

○ 유치기업의 **고용·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비율**(현행 50%) 및 **지원기간**(현행 6개월) 등 **개선**

< 인센티브별 향후 개편 방향(안) >

구분	현 황	개편방향(예시)	지원효과
조세 감면	○ 7년형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519개) ·산업지원서비스업(146개) ·외투지역(개별형), 경자구역 :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등 ○ 5년형 감면 ·외투지역(단지형), 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 5백만불 등	○ (대상) **고도기술사업**(산업서비스 포함)의 **대폭 조정정비** ○ (지원기준) 투자규모에 비례하여 기본적인 혜택 부여 ·고용창출에 따라 추가혜택	**고도기술·일정규모투자사업** 등에 대한 **기본지원 수단** ⇩
입지 지원	○ 외투지역 지정 유형 ·단지형 : 先지정 조성, 복합입주 ·개별형 : 유치기업 개별입주 ·서비스형 : 서비스업종 입주 ○ 지원방식 : 국비로 토지 매입후 임대지원	○ (유형) **운영유형 일원화** ·3가지 유형 → **개별형 중심** ·지역 지정 → **지원기업 선정** ○ (대상) 조세감면대상 중 **고용창출, 지역전략산업** 등에 유치효과가 있는 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 (방식) 국가매입·임대 → **임대비용 등 지원**	**투자유치 효과**에 따른 **추가적인 레버리지** ⇩
현금 지원	○ 지원대상 ·고도기술사업, 산업서비스업 ·부품소재, R&D사업 ·대규모 고용사업(예 : 제조업 300인, 숙박업 200인) 등	○ (대상) **10대 신성장동력, 글로벌 타겟팅 기업, 대형투자 프로젝트** 등 ○ (지원기준) **기술이전효과, 대규모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	**타겟분야·기업**의 최종적인 **유치협상 수단**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 대상 : 20명이상 고용시 ○ 국비(50%) : 지자체(50%) 매칭 ○ 1인당 월50만원 6개월까지 지원	○ **국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 ○ **지원기간 확대**	유치기업 **고용인력개발 촉진**을 위한 **활용**확대

IV. 외국인투자 유치의 거버넌스 혁신

【현황 및 문제점】

◇ **지경부(IK), 지자체** 등의 **개별적인 유치체제**와 단선적인 업무관계로 **유치역량**이 **분산**되고 **민간전문 역량**의 **활용 부족**

◇ 복잡하고 중복적인 제도·체제 등으로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미흡**

◇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 필요**

【개선 방향】

◇ **정부-지자체-IK-민간**이 **입체적·유기적**으로 **연계·협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유치 역량 강화**

<table>
<tr><th>주체</th><th>추진방향</th><th colspan="3">조정·협의체</th></tr>
<tr><td>중앙부처</td><td>■ 부처별 책임제 확립
■ 외국인투자 정책수립에 적극 참여</td><td>외국인투자 위원회</td><td rowspan="3">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td><td rowspan="4">FDI 라운드 테이블</td></tr>
<tr><td>지자체</td><td>■ 유치정보 공유 및 활동 협조
■ 역량 강화</td><td rowspan="2"></td></tr>
<tr><td>IK</td><td>■ 연구·분석·지원 기능 강화
■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td></tr>
<tr><td>민간</td><td>■ 정책수립 및 유치활동에 참여 확산</td><td colspan="2"></td></tr>
</table>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및 **관리체제**를 대폭 **정비**

◇ **외투기업**에 적합한 **동반성장 모델 정립** 및 **참여** 확산

1 입체적 투자유치 거버넌스 정립

1 수직적·수평적 투자유치 협력체제 강화

□ **중앙-지자체-IK-민간**이 참여하는 **수직적 거버넌스 구축**

○ (**중앙**)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능을 **정책 중심**으로 再정립하여 투자유치 **거버넌스**의 **구심체 역할**을 **강화**

- **집행**적 **기능**을 **대폭** 실무위로 **위임**하여 **중앙부처·지자체** 위원들의 **참여**와 **논의**를 **활성화**

○ (**지자체-IK**) '외국인투자홍보협의회'를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유치 주체간 정책공유** 및 **조정**기능 **강화**

* 기능 : IR·프로젝트 조정 → 외투위 결정사항 등 정부시책 전파·공유 포함
* 참여주체 : 지자체, FEZ, IK → 관계부처, 공공기관으로 확대

○ (**민간**) IK·지자체와 외투기업, 관련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FDI 저널 발간, 뉴스레터 발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강화**

□ **유치주체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확산**

○ (**중앙**) '**중앙부처 투자유치 책임제**'를 정착하여 **凡정부 거버넌스 확립**

- **부처별 특성**에 따라 주요 유치분야, 투자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동 IR, 홍보, 정책연구** 등의 **공조 강화**

○ (**지자체-IK**) 유치활동 평가를 통한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국가통합 IR 공동참여, 광역권별 공동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 확산**

- IK를 중심으로 분산*된 **투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활용**

* IK Website, Hi-Korea(G4F), OASIS(부품소재투자정보시스템), 중국투자정보시스템(예정) 등

○ (**민간**) 민관 공동의 '**FDI 라운드테이블**' 개최(분기별) 등 **민간전문가**의 **상시**적인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

- **경제연구원, 학계, 주한상의, 외투기업 CEO** 등 FDI 전문가들의 정책 과정상의 **참여 활성화**

2 민간역량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 **고급 민간전문가**의 **PM**(Project Manager) **지정 확대** 및 **정착**

○ **지자체, IK 중심**으로 운영중인 **PM 제도**를 전직 **CEO, 외교관** 등 **민간 전문가**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 금융, 지역개발 등 **민간 PM이 유용한 분야**를 **지정**하여 적극 활용

* '11년 하반기중 민간PM 활성화 방안 마련후 시범운영을 위한 PM 모집 공고

○ 민간PM **유치실적**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투자유치 마일리지 부여** 및 프로젝트별 마일리지 **기준 정립**

*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포상금 등 혜택을 부여하되 포상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 **산업·금융계 역량**을 통한 **유치활동** 전개

○ 국내 **수요대기업**의 **글로벌 산업역량**을 통한 투자유치

- 수요대기업과의 투자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해외 IR 공동** 참여 등 **글로벌 협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전개

○ **업종별** 민간 **단체**를 국가 IR 및 투자대상 발굴에 **참여** 유도

- 업종별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가 **필요**한 **국내기업 발굴**과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통해 우량자본의 국내유치 활성화

- **정책금융공사**(펀드운용)-**IK**(투자자 발굴)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글로벌 Win-Win 펀드**' 조성 **확대**

* 국내펀드의 공동투자로 외국 투자자의 리스크 경감 및 투자신뢰도 제고

□ **유력 외국인사**의 네트워크 및 전문성 **활용 확대**

○ 전통선진국 인사 위주로 위촉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홍보대사**'를 **신흥지역**(중동·러시아·인도 등)으로 **확대**

* (현재) 미, 영, 중, 일, 독 5개국 → (향후) 중동, 러시아 등으로 위촉 확대

3 유치기관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 **투자유치 Hub** 기능을 담당하는 **IK**의 **지원역할 강화**

○ **(협력체제)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력** 체제 강화

- **지자체·FEZ**와의 **협업사업**(공동IR,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투자유치 담당자 PM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지원**
- **입지**(산단공), **금융**(정책금융공사), **기술**(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직원 파견·교류, 공동사업·연구** 등 **추진**

○ **(기능강화) 해외현지 유치활동**과 **원스톱 지원 기능** 확대

- 중국·중동·러시아 등 **신흥 전략지역** KBC에 **IK 투자유치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해외현지 유치활동의 전문성 강화
- **지재권·교육** 등 투자환경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종합상담센터의 **부처 파견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

○ **(위상제고)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위상 정립**

- **전문위원**의 **채용확대**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역량**을 **강화**
- **'외국인투자정책센터'** 연구역량 확충으로 **Think-tank 위상 확립**

□ **지자체**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지원**

○ **지자체별 관심 테마**에 대한 정부-IK-민간 합동 **'지역 순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유치전략 수립 지원**

* 테마선정(지자체 수요)→심층조사(IK)→전략도출(워크숍)→공동 유치활동(필요시)

○ **'투자유치 표준 IR 매뉴얼'** 개발·보급, **프로젝트 상품화** 기법 지원 등 IK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유치활동 노하우 공유·확산**

□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제 구축**

○ 프로젝트 기획·발굴, 평가, 협상, 실행 및 사후관리까지 **투자유치 전주기**를 **포괄**하는 **전문·심화 교육과정 도입·지원**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1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의 전면적인 개정 추진

* '11.하반기중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 **(FDI 기준) 복잡한** FDI **인정기준**과 **범위**를 단순화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

○ **(인센티브) 지원 대상·기준** 등을 **유치효과**에 **기반**하여 재정립하고, **외투지역** 제도 정비, **국공유지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입지제도 개선**

○ **(지원시스템) 외투위·옴부즈만**의 기능 강화, **민간** 참여를 위한 **PM** 및 **포상제도** 개선 등 **유치역량 제고**를 위한 내용 반영

○ **(관리체제)** 복잡한 관리규정(신고·등록·변경 등)과 어려운 용어 등을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개정**

2 글로벌 기준에 기반한 FDI 관리시스템 개선

○ FDI 관리를 **신고기준과 도착기준**을 **병행**하여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도착기준 또는 순유입기준**으로 **전환**

* 외국환관리법령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착·순유입기준 관리 기반 구축

○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투기업의 경영실태, 산업기여도 등의 **FDI 통계 DB**를 **재설계**하고, **경제 기여효과 분석**을 **강화**

3 국제기구와의 적극적 협력과 대응 추진

○ **OECD, UNCTAD, APEC** 등과 **공동 관심의제***에 대한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내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등 **국내 환류**를 강화

* 다국적기업의 사회적책임 확산, 역내 상호투자 활성화 등

○ **국제기구 전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 참여를 지원하여 국제기구 활동 대응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

3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외투기업의 동반성장 참여 확산

○ 다국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외투기업形 동반성장 모델' 개발**

- **유형별, 업종별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동반성장 **참여 모델 제시**

  * (예) 기업협력형 : 국내기업과의 생산·기술 등 협력에 기여
  동반진출형 : 국내진출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홍보 동참 및 동반진출

- 국내외 다국적기업 **동반성장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외투기업의 날 행사**' 등을 활용하여 **우수기업 발표** 및 **포상**

○ **외투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활성화**

- **외투기업-국내 중소기업간 투자연계**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중앙 및 지자체 **투자유치 활동**시 **성공 외투기업 참여 확대**

- **1社1敎 연결, 모기업 인턴쉽**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제안 및 지원

2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강화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기반 구축 지원**

- 관계부처, 경제단체(전경련, 외국상의), 투자촉진기구(IK, 해외투자기업 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가이드라인 홍보** 및 **교육 강화**

- **ISO 26000**(기업의 사회적책임 표준) **확산 프로그램**과 **연계**

○ **국내연락사무소**(NCP) 규정을 개정하여 **구성·역할** 및 **절차** 등 **재정비**

- 외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로 **NCP 역량 강화**

3 외투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개선

○ 방송매체 등을 활용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효과 홍보로 우호적 정서 확산**

○ 외국인투자 주간행사 등 **대형 정기행사** 개최로 **국내외적 관심 제고**

Ⅴ. 편리하고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외투기업들의 전반적 만족도가 점차 상승**하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평가 순위도 계속 상승**

* 경영환경 만족도(KOTRA, %) : ('07) 74.7 → ('08) 76.5 → ('09) 86.6

◇ **외국인 투자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거나 **외국인투자가의 만족도가 낮은 분야를 집중 개선**할 필요

○ 기업 경영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가 이루어졌으나, **세무, 지재권 보호, 노동유연성** 등은 **경쟁국보다 다소 미흡**

* 지재권 보호지수 순위(IMD) : ('08) 37위 → ('09) 33위 → ('10) 32위

○ **수도권은 외국인의 생활불편 요소가 많은 부분 해소**되었으나, **비수도권·FEZ** 등은 **교육, 의료, 외국어 사용 등이 불편**

* 외국인투자가 설문 결과, 외국어 인프라, 지방 교육시설 등이 미흡(KOTRA, '10)

○ **각종 규제, 한국식 기준적용**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제도가 잔존

* FDI 규제지수(OECD, `10) : 48개국 중 12위(순위가 높을수록 규제多)

【개선 방향】

※ 외투기업,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47개 개선과제 선정

◇ (**경영환경**) **조세, 지재권, 노동시장** 등 일부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경제시스템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개선**(24개 과제)

◇ (**생활환경**) **교육·의료기관** 유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외국어 환경,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불편 해소**(23개 과제)

◇ (**애로해결**)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투자애로 해결시스템 강화**

1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확충

1 조세·관세제도 선진화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재정부)**

○ (**현황**) 복잡한 조세법령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들의 만족도 저하

○ (**개선**) **조세법령 정비 T/F**를 신설하여, **선진국 사례(영국, 호주 등)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임상시험용 수입의약품 관세 면제 지속 추진(재정부)**

○ (**현황**) 임상시험용 시약 **수입관세 면제가 한시적으로 적용중**('12년까지)

○ (**개선**) **다국적 제약사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관세를 면제 지속**

2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

□ **한국 노동상황 바로 알리기(고용부)**

○ (**현황**) **노사분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

* 분규건수(교섭단위 기준) : (06) 138 → (07) 115 → (08) 108 → (09) 121 → (10) 86

○ (**개선**) 한국 **노동정책 및 제도 관련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외투기업 협의체, 국제기구 배포 등 **대내외 홍보 강화**

□ **외투기업 노무관리 상담채널 활성화(고용부)**

○ (**현황**) 외투기업에 대한 **노동법·노동정책 정보제공** 및 **개별 노무관리 상담이 미흡**한 상황

○ (**개선**) **외투기업 전담 창구 지정** 및 **고용부·지방관서·상담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노무관리 상담 및 애로해결 지원을 확대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연착륙 지원(고용부)**

○ (**현황**) **복수노조 허용**('11.7월)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의 혼란** 등이 예상

○ (**개선**) 관련 해설서 성격의 **매뉴얼 등의 제작·배포**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혼란 최소화

□ **외투기업 고용환경 개선(고용부, 지경부)**

○ (**현황**) 지방 소재 중소 외투기업의 우수한 기술인력 채용에 한계

○ (**개선**)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방 외투기업의 고용여건 개선**

* 광역권별 주요 지역대학과 외투기업간 채용프로그램 별도 운영

3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강화

□ **지재권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정착(문화부, 특허청)**

○ (**현황**) 지재권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문화부 '08.9월, 특허청 '10.7월)되었으나, 아직은 **정착초기 단계**

○ (**개선**)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 및 인력 증설, 특허청 등의 특별사법경찰관을 Invest KOREA에 파견**하여 **위반 단속기능 강화**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문화부, 특허청, 교과부)**

○ (**현황**) 위조상품 구매, 불법 다운로드 등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부족

○ (**개선**) **지식재산 클린캠페인, 청소년용 교육콘텐츠 보급, 대중매체 활용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노력 강화

□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조기 도입(특허청)**

○ (**현황**) 번역오류 등으로 권리취득의 문제 빈번히 발생

○ (**개선**) 특허법조약을 반영하여 **외국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특허법 개정**

4 외투기업 입지공급 원활화

□ **외투기업 수의계약 가능입지 확대(지경부, 농림부, 국토부)**

○ (**현황**) 외투기업 수의계약 대상입지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공공기관법, 도시개발법, 물류시설개발법** 등 5개 법률에 의해 **조성된 부지만 가능**

○ (**개선**)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법** 등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도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허용 확대**

- 외투기업이 수의계약에 의해 입지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을 일정기간·일정수준 유지**하는 의무 부과

□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 확대(지경부)**

○ (**현황**) 분양위주의 공급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입지 유인이 부족**

○ (**개선**)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되는 **산업·물류용지의 일정비율 이상**을 외투기업에게 **임대 또는 분양용지로 우선 공급**

□ **투자입지 정보를 중국어와 일어로 제공(지경부)**

○ (**현황**) '10년부터 영문으로 투자입지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중

○ (**개선**) **중국어**와 **일어 버전**을 추가하고, **산업입지 및 파트너 기업 정보**의 **지속적 업데이트**

2 외국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1 외국인의 교육서비스 개선

□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지경부, 교과부)**

○ (**현황**) **과실송금 미허용**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활동이 크게 제약**

○ (**개선**)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법인의 결산 잉여금을 해외의 다른 회계로 전출 허용**

*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원발의, '10.9)이 국회에 계류중

□ **초·중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지경부, 교과부)**

○ (**현황**) **지방과 FEZ**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외국인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투자유치 애로로 작용

* (**외국인학교**) 47개교, (**외국교육기관**) 초중고 2개교(인천송도, 대구), 대학원 2개교(광양, 부산)

○ (**개선**) **미설립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설립 지원**

2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개선

□ **경제자유구역內 외국의료기관 설립 절차규정 마련(지경부, 복지부)**

○ (**현황**)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근거에도 불구하고 **절차법 부재로 설립이 제한**되어 투자유치 애로

○ (**개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절차 근거법** 마련

*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원발의, '10.9)이 국회에 계류중

□ **외국의료기관(경제자유구역內) 운영특례 적용 확대(지경부, 복지부)**

○ (**현황**)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서 설립·운영되기 위해서는 **외국병원 특성에 맞는 특례규정** 필요

○ (**개선**)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기준 완화, 진단서·의료기관 명칭 등에 외국어 기재 허용**

*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원발의, '10.9)이 국회에 계류중

3 언어생활 불편해소 및 출입국 편의성 제공

□ **문화예술행사, 생활편의시설 등 외국어안내 확대(부처·지자체 공동)**

○ (**현황**) **한국인의 영어사용 능력부족**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문화예술 및 각종 편의시설 이용 애로**

○ (**개선**) **문화예술행사, 전화자동응답(ARS)**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 확대, **외국인 이용 빈도가 높은** 병원, 숙박업소 등 **주요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공급**

□ **국내 체류외국인의 방송 청취범위 확대(방통위, 지자체)**

○ (**현황**) 국내 체류외국인의 국내 방송프로그램 청취범위가 제한적

○ (**개선**) 외국어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영어전용 **FM라디오 방송 서비스 확충**, 국내 **IPTV 영어자막 서비스 확대**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대상 확대(법무부, 지경부)**

○ (**현황**) **해외 母기업 임직원**만 출입국 우대카드 이용 가능

* 현재 모기업 임직원 129명이 출입국 우대카드 이용중

○ (**개선**) **아시아 지역본부 임직원으로 발급대상 확대**

* 실질적 우대기능 제공을 위해 총 발급자수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

□ **자동출입국 이용가능 외국인투자가 점진적 확대 추진 (법무부)**

○ (**현황**) '10.8월부터 외국인 자동출입국제도를 시행중이나, **200만불 이상 고액 외국인투자가로 1년이상 체류한자**에게만 허용

* 200만불 이상 고액 외국인투자가 수('10.8월) : 748명

○ (**개선**) 이용실태를 보아가며 **자동출입국 이용기준**을 **단계적 완화 검토**

3 상시적인 투자애로 해결체계 구축

1 투자애로 상시 발굴을 위한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

□ **옴부즈만·지자체·외투기업간 Hot Line 운영**

○ **투자규모·업종** 등을 고려, **Hot Line 구축대상 외투기업 100여개 선정**

○ **옴부즈만 홈닥터를 지역별 담당자**로 지정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역내 외투기업을 전담**토록하여 **수시로 애로사항 파악**

<Hot-Line 구성(예)>

옴부즈만		지자체			전담 외투기업
홈닥터	↔	충청권	대전시	↔	A사, B사, C사 등
			충남도	↔	D사, E사, F사 등
			충북도	↔	G사, H사, I사 등

□ **현장 밀착형 투자애로 발굴을 위한 현장과의 소통강화**

○ 외투기업 애로분야별 전문위원을 증원하여 **홈닥터 왕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기업의 현안 애로청취를 위한 **모기업 파견제도 강화**

○ **주요 외투지역 및 외투기업 현장방문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주한 외국상의와 경제단체간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

* 「IK 기동상담서비스(Mobile Consulting Service)」와 연계하여 **매월 1회** 실시

□ **페이스북(Facebook) 등 SNS를 활용한 실시간 애로파악**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旣진출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잠재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애로도 파악**

2 투자환경개선 및 투자애로해결 프로세스 혁신

□ **비교우위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애로 해결**

○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투자환경 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열위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격년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비교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에 결과 발표

○ **투자애로 해결성과**에 대해 **외국인투자가를 대상으로 체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계획**에 반영

□ **복합·중요·장기지연 애로사항의 신속 해결시스템 운영**

○ 애로사항별 **유관부처·기관간 애로해결을 위한 T/F** 구성·운영

* **(구성)** 지경부 투자정책관, 옴부즈만, 관계부처·지자체 외국인투자진흥관, 경제단체 등

-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채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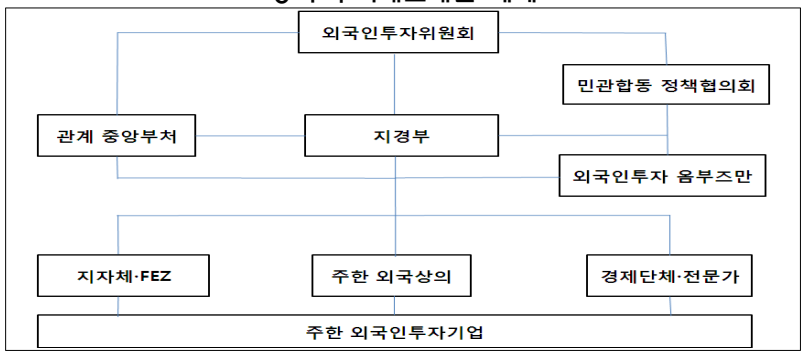
○ **해결이 곤란한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하여 근원적으로 해결

□ **애로해결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외국인투자 공로자 포상시 **투자애로 해결에 功이 큰 우수기관 및 우수자 별로 포상**을 확대하여 애로해결 참여도를 제고

○ 애로해결로 **증액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의 경우, 해당기업의 **해외본사 연수기회** 부여

< 상시 투자애로해결 체계 >



참고 부처별 투자환경 개선과제

주관부처	과제내용	개선방안
기재부	○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 ·조세법령이 복잡하여 외국인투자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움	·조세법령 정비 TF를 신설하여, 선진국 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임상시험용 수입의약품 관세 지속 면제** ·임상시험용 시약 수입관세 면제가 한시적으로 적용중('12년까지)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관세 지속 면제
복지부	○ **제주도內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제주도내에 제한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 **FEZ內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설립요건·절차 구체화 (지경부 공통)** ·외국의료기관 유치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 및 절차 구체화 필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을 위한 허가요건 명확화 및 세부절차 마련
	○ **FEZ內 외국의료기관 운영특례 적용 확대(지경부 공통)**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서 설립·운영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특례규정 필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완화 ·진단서·의료기관 명칭 등에 외국어 기재 허용
	○ **외국인 진료서비스 개선** ·언어장벽으로 인한 외국인 의료서비스 불편해소 필요	·외국인 진료가능 의료기관 활성화 ·의료 외국어 안내서비스 확대
국토부	○ **외국어 교통안내체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외국어 교통안내 체계가 다소 미흡	·지자체별로 외국어 교통안내체계 개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 후 지자체 간 비교평가 실시
	○ **기업도시內 외국계 의료기관 및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 ·기업도시에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교육기관(초중등학교) 설립이 배제	·기업도시내에도 외국계 의료기관 및 초·중등학교 설립을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
특허청	○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정착** ·도입초기('10.7월)로 기능 강화 필요	·수사역량 강화 및 단속 지속 추진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위조상품 구매, 불법 다운로드 등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부족	·지식재산 클린캠페인, 청소년용 교육콘텐츠 보급, 대충매체 활용 홍보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도입** ·번역오류 등으로 권리취득의 문제 빈번히 발생	·특허법조약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

금융위 중기청	○ **국제회계기준(IFRS) 조기 정착** ·2011년에 도입되는 K-IFRS이 기존의 기업 회계기준과 달라 혼란야기 우려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정착 지원 ·중소기업전용 회계기준 개발
고용부	○ **한국 노동상황 바로 알리기** ·노사분규가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노동정책 및 제도 관련 홍보책자 등의 외투기업 협의체, 국제기구 배포 등 대내외 홍보활동 확대
	○ **복수노조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허용 관련 세부지침 마련 필요	·교섭창구 단일화 지침을 조속히 마련
	○ **노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적용 필요	·외투기업 노사관계도 당사자 자율해결이라는 기조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
	○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컨설팅** ·건전한 노사관계정착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선결과제	·외투기업 CEO 및 실무자 대상 간담회 개최 등 각종 자문서비스 제공
	○ **외투기업 고충상담 채널 활성화** ·노동법·노동정책 정보제공 및 개별 고충상담이 미흡	·외투기업 전용창구 지정, 고용부·지방관서·상담센터간 연계를 강화하여 고충 해결 지원
교과부	○ **외국교육기관 회계 관련 제도 개선** ·과실송금 미허용 등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활동 크게 제약	·잉여금을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외국학교법인에 전출 허용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외국 본교 회계기준 적용 허용
	○ **외국인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 도입 필요	·외국인학교의 국제표준교육과정 도입, 국제적 수준의 학교인증 획득 유도 등
지경부	○ **토지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공동과제)**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법 등으로 개발된 토지는 수의계약 불가	·수의계약 공급 및 임대료감면 대상 지속 확대
	○ **외국어 입지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현행 입지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미흡	·외국인투자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외국어 입지정보시스템의 기능 강화
	○ **FEZ內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 확대**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 규모 기준 부재	·FEZ내에 조성되는 산업·물류용지의 일정비율을 외투기업에 우선 공급
	○ **외국인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설립지원** ·지방과 FEZ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외국인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투자유치 애로로 작용	·외국교육기관 미설립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설립 지원

	○ **레드카펫 서비스 확대** ·외투관련 VIP 대상 '10.8월부터 시행 중	·주요 방한투자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레드카펫 서비스 지원
	○ **모범투자자에 대한 명예시민권 부여** ·명예시민권자 중 외국인투자기업 비중은 1% 미만	·모범투자자에 대한 명예시민권 확대
	○ **전화자동응답(ARS) 외국어 안내 확대** ·중앙부처, 지자체별로 외국어 ARS 확대 필요	·외국어 ARS 서비스 지속 확대 *현재 방통위, 서울시는 旣시행중
	○ **한국어강좌(KLS) 서비스 확대 시행** ·현재 생활 중심 강좌로 비즈니스와의 연계 부족	·생활 뿐 아니라 비즈니스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 **외투기업 인식 개선** ·외투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하여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사회적 활동 참여, 고용창출 확대 유도, 동반성장 확산 등 추진
	○ **국내외 유력매체에 투자환경 홍보 강화** ·해외주요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부족	·한국의 투자환경 대내외 홍보활동 체계화
	○ **주한외국상의 공동투자유치 활동 강화** ·투자유치에 주한외국상의와 협력 강화 필요	·주요 주한상의와 정례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하여 증액투자 유도
	○ **외투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방 소재 중소 외투기업의 우수한 기술인력 채용에 한계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등으로 지방 외투기업 고용여건 개선
	○ **투자제한업종 개방수준 확대 추진** ·방송, 통신, 항공 등 일부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제한	·방송·통신·항공 등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방수준 확대 추진
	○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류 온라인화 확대** ·투자관련 행정처리 절차가 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	·온라인화 가능한 행정처리 절차를 발굴하여 간소화
	○ **Cyber Invest Korea(G4F) 활성화** ·많은 예산이 투입된 G4F의 활용도가 낮음	·투자자 매칭 프로그램 개선 등 G4F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 **불합리한 임대관행 개선** ·월세전액 선불은 우리나라의 관행으로 개선하는데 어려움	·주택임대차 영문표준계약서 개정 등 월세선불관행 개선 위한 노력 지속
법무부	○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확대** ·현재 제주도, 강원도 알펜시아에 시행중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확대 필요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 구입 외국인에게 특별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외국인 투자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절차 간소화** ·서울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당일발급 불가	·기업투자자(D-8)와 그 가족(F-3)의 체류허가 절차를 당일처리 가능하도록 개선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제도 개선** ·발급대상이 모기업 임직원으로 한정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대상을 아시아 지역본부임직원 등으로 확대 *단, 총 이용자수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
	○ **외국인 자동출입국 제도 점진적 확대 추진** ·'10.8월부터 외국인 자동출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나, 200만불 이상 고액 외국인 투자자로 1년 이상 체류한 자에게만 허용	·이용실태를 보아가며 자동출입국 허용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
방통위	○ **외국어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외국인이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한적	·외국어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 **국내 IPTV 영어자막서비스 확대** ·영어자막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문화적 동화가 어려움	·인기도를 고려해 뉴스, 드라마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영어자막서비스 실시
	○ **영어전용 FM방송 서비스 확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광역시 지역 위주로만 도입	·지자체 주도로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
	○ **외국인 인터넷 사용환경 개선**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개선 필요	·외국인의 인터넷 사용 편의 지속 제고
중기청	○ **외국어 웹사이트 개설 지원** ·외국인투자가가 선호할 만한 업체가 외국어 웹사이트가 없어 투자사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투자처로 유망하지만 외국어 웹사이트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외국어 웹사이트 개설 지원
문화부	○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강화** ·불법 업로드 등 저작권 침해사례 잔존	·재택 모니터링 요원 확대, 불법복제물자동추적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문화예술행사 등 외국어 안내 확대** ·시범실시 해오던 대상을 확대할 필요 * 현재 예술의 전당, 국립국장,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중	·국립공연장내 외국어 안내 사업 지속 확대
전부처	○ **서비스시설에 대한 외국어 어플리케이션 제작·공급** ·외국인들이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문화예술 및 각종 편의시설 이용 애로	·외국인 이용 빈도가 높은 병원, 숙박업소 등 주요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공급

Ⅵ. 후속조치 계획(Action Plan)

1-1.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1-1-1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투자유치로드맵 수립 ·신성장동력 투자유치 확대	지식경제부	'11 '12 '13
1-1-2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유치활동 강화 ·숙련집약형 제조업 유치 활동 강화	지식경제부	'11 '12 '13
1-1-3	지역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FEZ 조기개발계획 수립 ·FEZ 기본계획수립	지식경제부	'11 '12 '13

1-3. 맞춤형 유치모델을 통한 유치국의 다변화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1-2-1	전통국별 유치분야 타겟팅	·지역별 투자유치분야 및 타겟기업 선정	지식경제부	'11 '12 '13
1-2-2	FTA활용 및 다중협력 강화	·유치 유망업종 분석 ·GAPS 및 GCGK사업 추진	지식경제부	'11 '12 '13
1-2-3	부품소재 투자유치 활성화	·부품소재투자협력센터 기능 강화 ·기업 투자정보 내실화	지식경제부	'11 '12 '13
1-2-4	對中 투자협력채널 및 China Desk 확대	·민관 투자협력채널 신설 ·China Desk 추가설치	지식경제부	'11 '12 '13
1-2-5	신흥국 및 유망국 대상 투자유치 활동강화	·홍콩, 싱가폴 등 중화권 IR ·중동 및 러시아, 인도 IR	지식경제부	'11 '12 '13

1-3. 인센티브 시스템의 개편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1-3-1	조세감면 체제 정비	·개선방안 연구·협의 ·관련법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11 '12 '13
1-3-2	입지지원 체제 전환	·외투지역 운영지침 개정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지식경제부	'11 '12 '13
1-3-3	현금지원 제도 개선	·현금지원 개선방안 마련 ·현금지원 운영요령 개정	지식경제부	'11 '12 '13
1-3-4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개선	·개선안 마련·협의 ·관련 지침 개정	지식경제부	'11 '12 '13

2-1. 입체적 투자유치 거버넌스 정립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2-1-1	외투위 기능 재정립	·실무위 위임사항 확대 ·관련 규정 개정	지식경제부	'11 '12 '13
2-1-2	FDI홍보협의회 개편	·정책공유 기능 강화 ·참여주체, 기능 확대	지식경제부	'11 '12 '13
2-1-3	對민간 FDI 정책 홍보	·IK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KOTRA	'11 '12 '13
2-1-4	중앙부처 투자유치 책임제 정착	·부처별 촉진계획 수립 ·활동 평가계획 수립	관계부처 공동	'11 '12 '13
2-1-5	지자체간-IK 협력 네트워크 확산	·통합IR, 공동워크샵 개최 ·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지식경제부 KOTRA	'11 '12 '13
2-1-6	민간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	·FDI 라운드테이블 개최	지식경제부	'11 '12 '13
2-1-7	민간전문가 PM 지정	·PM운영제도 개편	지식경제부	'11 '12 '13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2-1-8	산업·금융계 공동 유치 활동 전개	·IR 공동 참여 활성화 ·금융기관 투자펀드 추진	지식경제부 KOTRA	'11 '12 '13
2-1-9	외국인 투자홍보대사 확대	·신흥지역 등 유력인사 신규 위촉	지식경제부	'11 '12 '13
2-1-10	IK 기능 강화	·전략지역 KBC 활동 강화 ·FDI 연구역량 강화	KOTRA	'11 '12 '13
2-1-11	지자체 전략적 유치활동 지원	·지역순회 워크샵 개최 ·표준IR 매뉴얼 보급	지식경제부 KOTRA	'11 '12 '13
2-1-12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	·전문 교육과정 도입	지식경제부	'11 '12 '13

2-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2-2-1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전문기관 연구용역 ·개정안 수립 및 협의	지식경제부	'11 '12 '13
2-2-2	FDI 관리시스템 개선	· 도착·순유입기준 관리기반 구축	지식경제부	'11 '12 '13
2-2-3	국제기구 협력 활성화	·공동 관심의제 참여 확대 ·전담 전문가 양성	지식경제부	'11 '12 '13

2-3.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2-3-1	외투기업 동반성장 참여 확산	·참여모델 개발·제시 ·모범사례 발굴·확산	지식경제부	'11 '12 '13
2-3-2	사회적책임 이행 지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안내·홍보	지식경제부	'11 '12 '13
2-3-3	사회적 분위기 개선	·우수사례 홍보 활동 ·외국인투자 주간행사 개최	지식경제부	'11 '12 '13

3-1.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확충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3-1-1	조세 법령 정비	·조세법령 정비 T/F 신설 ·개선안 마련	기획재정부	'11 '12 '13
3-1-2	임상시험용 수입의약품 관세 면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관세 면제 지속	기획재정부	'11 '12 '13
3-1-3	한국 노동상황 바로 알리기	·노동정책 및 제도 관련 홍보책자 배포 등 대내외 홍보 강화	고용노동부	'11 '12 '13
3-1-4	복수노조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지침 마련	고용노동부	'11 '12 '13
3-1-5	노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엄격한 법 적용	고용노동부	'11 '12 '13
3-1-6	외투기업 노무관리 지원 컨설팅	·밀집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 각종 자문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11 '12 '13
3-1-7	외투기업 고충상담채널 활성화	·외투기업 전용창구 지정, 고용부·지방관서·상담센터간 연계강화	고용노동부	'11 '12 '13
3-1-8	외투기업 고용환경 개선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지방외투기업 고용여건 개선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11 '12 '13
3-1-9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정착	·지역사무소 및 인력 증설 ·특별사법경찰관 IK 파견	문화관광부 특허청	'11 '12 '13
3-1-10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문화관광부 특허청	'11 '12 '13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3-1-11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문화관광부	'11	'12	'13
3-1-12	외국어 특허출원제도 조기 도입	·특허법 개정	특허청	'11	'12	'13
3-1-13	토지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공동과제)	·수의계약 대상 토지 확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부 국토해양부	'11	'12	'13
3-1-14	외국어 입지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중국어·일어버전 추가	지식경제부	'11	'12	'13
3-1-15	FEZ內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 확대	·산업물류용지 일정비율 외투기업 우선공급	지식경제부	'11	'12	'13
3-1-16	국제회계기준(IFRS) 조기 정착	·IFRS 성공적 정착 지원 ·중소기업전용 회계기준 개발	금융위원회 중기청	'11	'12	'13
3-1-17	레드카펫 서비스 확대	·레드카펫 서비스 지속 지원	지식경제부	'11	'12	'13
3-1-18	외투기업 인식 개선	·사회적 활동 참여 유도 ·고용창출 확대 유도 ·동반성장 확산 추진	지식경제부	'11	'12	'13
3-1-19	투자환경 홍보 강화	·국내외 유력매체 홍보 강화	지식경제부	'11	'12	'13
3-1-20	주한외국상의 공동투자유치 활동 강화	·정례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지식경제부	'11	'12	'13
3-1-21	투자제한업종 개방수준 확대	·소관부처 협의 (방송,통신,항공분야 등)	지식경제부	'11	'12	'13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3-1-22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류 온라인화 확대	·온라인화 가능 행정처리 절차 발굴 및 간소화	지식경제부	'11	'12	'13
3-1-23	Cyber Invest Korea 활성화	·투자자 매칭프로그램 개선 등	지식경제부	'11	'12	'13
3-1-24	외국어 웹사이트 개설 지원	·벤처 기업 등 지원	중소기업청	'11	'12	'13

3-2. 외국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3-2-1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결산 잉여금 해외 잔출 허용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11	'12	'13
3-2-2	외국인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지원	·미설립 지역 대상 설립 지원	지식경제부	'11	'12	'13
3-2-3	외국인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국제표준교육과정 도입 ·국제수준 인증 획득 유도	교육과학부	'11	'12	'13
3-2-4	기업도시內 외국계 의료기관 및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	·관련 법령 개정	국토해양부	'11	'12	'13
3-2-5	제주도內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제주도內 의료특구 지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보건복지부	'11	'12	'13
3-2-6	FEZ內 외국의료기관 설립 절차규정 마련	·설립 절차 근거법 마련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11	'12	'13
3-2-7	FEZ內 외국의료기관 운영 특례 적용 확대	·특수의료장비 설치 완화 ·진단서 등 외국어 기재 허용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11	'12	'13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3-2-8	외국인 진료서비스 개선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의 진료센터 지정 ·의료 외국어 안내 확대	보건복지부	'11	'12	'13
3-2-9	문화예술행사 등 외국어 안내 확대	·외국어 안내 대상 지속 확대	문화관광부	'11	'12	'13
3-2-10	서비스시설에 대한 외국어 어플리케이션 제작·공급	·어플리케이션 제작·공급	전부처	'11	'12	'13
3-2-11	ARS 외국어 안내 확대	·외국어 ARS 서비스 확대	지식경제부	'11	'12	'13
3-2-12	한국어강좌 확대	·비즈니스 한국어 강좌 개설	지식경제부	'11	'12	'13
3-2-13	외국어 교통안내체계 개선	·지자체별 안내체계 개선 ·지자체간 비교평가 실시	국토해양부	'11	'12	'13
3-2-14	외국어 프로그램 확대	·외국어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	방송통신위	'11	'12	'13
3-2-15	영어전용 FM라디오 서비스 확대	·대상 지역 지속 확대	방송통신위 지자체	'11	'12	'13
3-2-16	국내 IPTV 영어자막 서비스 확대	·주요 프로그램 영어 자막서비스 실시	방송통신위	'11	'12	'13
3-2-17	외국인 인터넷 환경 개선	·외국인 인터넷 사용 편의 지속 제고	방송통신위	'11	'12	'13
3-2-18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범위 확대	·아시아 지역본부 임직원 발급	법무부 지식경제부	'11	'12	'13
3-2-19	자동출입국 이용가능 외국인 투자가 점진적 확대 추진	·이용기준 단계적 완화	법무부	'11	'12	'13

3-2-20	불합리한 임대관행 개선	·주택임대차 영문표준계약서 개정 등	지식경제부	'11	'12	'13
3-2-21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확대	·투자이민제도 단계적 확대	법무부	'11	'12	'13
3-2-22	체류허가 절차 간소화	·기업투자자 및 가족의 체류허가 절차 개선	법무부	'11	'12	'13
3-2-23	모범투자자 명예시민권 부여	·명예시민권 확대	지식경제부	'11	'12	'13

3-3. 상시적인 투자애로 해결체계 구축

번호	과제명	실천계획	주관기관	추진일정		
3-3-1	고충파악을 위한 Hot Line 운영	·대상 외투기업 선정 ·수시 애로사항 파악	지식경제부	'11	'12	'13
3-3-2	현장밀착형 투자애로 발굴	·홈닥터 왕진서비스 확대 ·모기업 파견제도 강화 ·현장방문 간담회 정례화	지식경제부	'11	'12	'13
3-3-3	SNS을 활용한 고충파악	·SNS 활용 투자애로 파악	지식경제부	'11	'12	'13
3-3-4	선제적인 투자애로 해결	·경쟁국 투자환경 비교분석 ·체감 만족도 조사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	지식경제부	'11	'12	'13
3-3-5	애로사항 신속 해결시스템 운영	·T/F 구성 및 운영 ·외국인 투자위원회 상정	지식경제부	'11	'12	'13
3-3-6	애로해결 인센티브 확대	·우수기관·우수자 포상 확대 ·해외본사 연수기회 부여	지식경제부	'11	'12	'13